

# 데스크시각

### 박치경



이명박 정부 구호의 색깔은 '녹색'이다.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다. 미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며 새로운 성장을 꾀하는 '녹색 뉴딜'이 이미 등장했고, 지난 16일에는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절감 대책도 나왔다.

지나 동안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여 생활과 의식에서 녹색성장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의미심장한 녹색성장이

쟁'을 통해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대다수 국민은 한나라당이 과연 일반대중을 위한 정당인지를 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한나라당의 궤적을 되짚어 보면 집권당으로서 보편당이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 해왔던 지를 의심케 한다.

'친이'(친 이명박계), '친박'(친 박근혜)으로 양분돼 있는 한나라당 내부의 불협화음은 국민의 귀를 피곤하게 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권세력 내부 간 대통령 측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 시계가 거꾸로 가는 동안 부럽게도 미국에서는 '녹색정치'의 꽃이 피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여느 나라의 대통령급 대우를 받는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 정치에도 녹색 바람을

물론 40대의 젊은 대통령 오바마의 '정치적 계승'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파나 라이벌끼리 싸우는 모습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서는 무척이나 신선하게 다가왔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도 최악의 경제난을 헤쳐 가려는 집정부에 신속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힘을 모아 주었다. 난장판이 벌어지기 일수인 우리 국회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녹색정치도 짝을 띄워야 한다. 정치에 녹색 바람이 불어 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의 길목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 '녹색정치'는 안될까?

도통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 정치다. 세상이 바뀌고 국민의 의식까지 녹색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치만큼은 구태에 서 요지부동이다. 아니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곳곳에서 녹색 구호가 퍼져가고 있는 사이 정치는 후퇴를 거듭했다. 폭력과 허송세월로 지새우는 국회, 권력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에서는 녹색의 싹을 찾아볼 수 없다.

우선 국회를 보자. 각 정파는 '입법전

근에 대한 권력의 쏠림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는 세력의 알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도 있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녹색정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 기대에 호응하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한나라당의 '황포'에 맞서 어쩔 수 없이 국회 회의를 접거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더라도 그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선 유감이다. 민주당의 '울분'을 심본 이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1세기와는

### 시설

## 학업평가, 실패 거두려면 공정성 확보해야

16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같은 나라의 학교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학력평가 공개는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찾아내 집중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진이자 처방안 셈이다.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진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학력평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평가 시험관리에서부터 감독, 채점까지 해당 학교 교사가 직접 하다 보니 성적을 올리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 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무성의하게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 제정도 개별 학교별로 이뤄졌다. 특히 시험 문항 가운데 과목별로 주

관식 문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채점 교사에 따라 점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행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학력 평가 결과를 학교장과 교사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벌써 학교 간 과열경쟁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한 갖은 방법이 동원될 개연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학력평가 체제로는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학력평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학력평가 관리를 개별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직접 관리하러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신빈곤층 300만... 맞춤형 안전망 절실하다

최근 경기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신(新) 빈곤층'이 당국에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원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 긴급지원금 2억7천420만 원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들어 지난달 31일 현재 긴급복지지원 신청건수는 449건(지원금 2억7천42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6건(2억2천405만 원)에 비해 무려 75.4%나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워크아웃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의 지난달 신용회복 관련 상담건수는 7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1건에 비해 42.1%인 211건이나 급증했다. 하루 상담건수도 평균 35~36건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13

건 이상 늘었다. 이들 사례는 신 빈곤층이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신 빈곤층을 끌어안을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던 하나 1년 예산이 51억 원에 불과해 급증하는 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든 위기상황이다. 신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맞춤형 안전망을 짜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신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 정부의 '신 빈곤층 보듬기'가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핀칼럼

### 김병인



미국발 금융 위기로 달라져 시대의 종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제패권 경쟁이 돌발에서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경성수치 적자는 갈수록 늘어났고, 감세와 경쟁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쌍둥이 적자 심화도 예상된다. 달러 약세로 경성수치 적자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재정 수고를 감안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볼 보듯 뻔하다. 앞선 몇 차례의 도전에도 끄떡 없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번 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라 평가가 나오는 것도

가입 이후 경제성장률도 매년 10%가 넘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올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수출은 다소 추축하겠지만 내수와 투자확대를 통해 8% 내외 성장을 하고,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것이 유력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자신감도 충분하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도 눈에 띄게 팽창중이다. 외교적으로도 '다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전락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 기고

### 손재윤



지난해 5월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유치경쟁에서 광주는 아쉽게 분패하고 말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사태에 우리 광주를 빠른 시일 내에 세계에 알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도전하고 주력했던 광주시민들의 모습은 당당했다.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열기는 하나 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자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해 세계 170여개국의 FISU회원국에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집행위원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소중한 경험과 자신감은 2015년 하계U대회 제도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제도의 과정이 다시 한번 광주 시민의 자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빛고를 광주의 이름을 빛내는 성공의 과정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원국 170여개 나라의 대학생들이 빛고를 광주를 방문하여 스포츠의 뜨거운 경쟁과 열기를 발산하고 광주시

## 광주 U대회 유치 모두가 힘 모아야

지난해 12월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라는 도전장을 내민 광주 시에겐 합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한 번의 실패를 거머 삼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국제적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것은 단순히 체육행사 하나를 치르는 소비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15 하계U-대회 유치 역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여건에서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지방체육의 발전과 그동안 소외받았던 장애인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윤택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5월 142만 광주시민은 하계 U-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비록 강대국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최초의 국제대회 도전을 통

민들의 호응과 응원이 어우러져 환희의 한마당을 연출한다면 이것이 곧 5·18 민주화운동의 근원지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전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시민 모두의 합의를 전제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치활동의 과정에서 더욱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그 힘으로 2009년 5월 2015 하계U-대회 유치라는 승전보가 빛고를 광주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2013년 U-대회 도전에서 뿌려놓은 씨앗으로 2015년 U-대회 유치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어 광주시민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공유하고 그 기쁨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광주장애인수영연맹을 대표하고 광주장애인 체육인들을 대신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2015 하계 U-대회 유치 도전에 적극 동참하는 뜻을 표명하며 광주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광주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강호순 추종 카페 충격... 인터넷 인성교육 강화해야

네이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추종하는 카페가 개설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분노를 넘어 할말을 잃었다.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의 네티네임은 'GreatKiller(위대한 살인자)'라고 한다. 그곳에 가입한 회원이 5000명을 넘었다고 하지만, 물론 그 가입자들은 그 카페를 만든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더 많을 걸로 본다.

그러나 어쩌거나 그런 카페가 만들어졌다 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니 이게 제정신

인 국민성인가. 더군다나 보도를 보니 천인공도할 연쇄살인범 주제에 강호순은 자신의 범행을 책으로 쓰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강호순은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 것은 그냥 두고 볼일 아니다. 인터넷에 대한 인성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터넷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 <이승철·전남 목포시 옥암동

### 無等鼓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가 가정과 상업시설에까지 확대 실시된다. 그간 산업부문에서만 시행해오던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를 본다. 이미 지구촌 각 지역에서 대중수, 가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남북과 북극의 빙하까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탄소포인트제도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 탄소포인트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수도 등 기준 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

을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으로 밝혀진 이상, 체계적인 감축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운전자의 경우 급출발·제동이나 공회전을 줄이는 에코 드라이브(Eco Drive)를 습관화하는 것도 배기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일 수 있다.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기 콘센트를 뽑아둔다거나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를 줄이는 '사소한 관심'이 지구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 식당들 반찬량 줄여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얼마 전에 할머니 생신날에 가족 모두 음식을 하러 근처에 있는 외식집에 들렀다. 때마침 점심 때 많은 외박들이 들렀는데 고기와 더불어 쌈배추와 야채 등이 들어왔는데 상추와 깻잎, 고추, 마늘 등이 너무 많아 버리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줄때는 적정량만 주고 고객이 더 원할 경우 추가로 가져다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예 처음부터 너무 다량으로 주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반이상이나 남기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물론 여유있고 넉넉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버려버린 야채고 그러잖아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터에 이런 야채까지 폐기처분량이 많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모자랄 듯하게 기본량만 주고 나머지는 고객이 원할 경우 더 가져다주는 방법을 모든 음식점들이 택했으면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